

법과 정치

- | | | | | |
|-------|-------|-------|-------|-------|
| 1. ② | 2. ② | 3. ③ | 4. ③ | 5. ② |
| 6. ① | 7. ④ | 8. ⑤ | 9. ① | 10. ① |
| 11. ③ | 12. ① | 13. ④ | 14. ⑤ | 15. ⑤ |
| 16. ② | 17. ⑤ | 18. ④ | 19. ③ | 20. ② |

- A 관점은 정치를 넓은 의미로 보는 집단 현상설이다. ② 집단 현상설은 국가가 아닌 사회 집단인 학급의 회장을 선출하는 행위와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행위 모두 정치 현상으로 본다. ① 물리적 강제력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관점은 국가 현상설이다. ③, ④, ⑤ 국가 현상설에 대한 설명이다.
- 값은 흡스, 을은 로크이다. ㄱ. 흡스는 인민이 주권자인 군주에게 복종함으로써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ㄴ. 로크는 흡스와 달리 권력 분립을 강조하였다. ㄷ. 일반 의지의 구현을 강조한 사회 계약론자는 루소이다. ㄹ. 로크의 경우에도 재산권을 자연권으로 인정하였다.
- 법률의 내용과 목적을 문제 삼는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고,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따라서 ㉠에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 ㄷ, ㄹ. 형식적 법치주의와 달리 실질적 법치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합치되는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통치의 합법성뿐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도 강조한다. ㄱ, 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악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경계한다.
- A는 청구권, B는 사회권, C는 자유권이다. ㄴ. 자유권, 청구권과 달리 사회권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 ㄷ. 청구권, 사회권과 달리 자유권은 소극적·방어적 권리에 해당한다. ㄱ. 청구권뿐 아니라 사회권도 포괄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청구권과 사회권의 응답이 모두 '아니요'인 질문이다. ㄷ.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즉, 세 기본권의 응답이 모두 '아니요'인 질문이다.
- A는 국회, B는 대통령이다. ②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①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대통령의 재의 요구 대상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다. ④ 국회 의장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지만, 대통령은 가질 수 있다. ⑤ 국가의 예산안 심의권과 의결권 모두 국회에 있다.
- ①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이면, A는 국회, B는 법원, C는 정부이다. 탄핵 소추권은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② ㉡이 '대법원장 임명권'이면, A는 정부, B는 법원, C는 국회이다. 사면권은 정부가 법원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③ ㉢이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이면, A는 법원, B는 국회, C는 정부이다. 국정 감사권은 국회가 다른 국가 기관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④ ㉣이 '명령·규칙 심사권'이면, A는 국회, B는 정부, C는 법원이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은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⑤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은 국회이고, 조약 비준 동의권은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 ④ 혼인 신고를 한 법률혼의 경우라면, 유언장의 법적 효력과 상관없이 아내 을에게는 법정 상속권이 인정된다. ① ㉠, ㉡에서 병의 법정 상속액은 5억 원으로 다른 경우보다 많다. ② ㉢에서 법정 상속이 개시되며, 법정 상속에서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동순위 상속권자이다. ③ 병은 ㉠, ㉡ 모두에서 ○○단체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정은 직계 존속으로 ㉢에서는 선순위

자인 직계 비속이 있기 때문에 법정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시민 단체와 정당이 공익을 추구하고,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이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A는 이익 집단, B는 시민 단체, C는 정당이다. ①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정당과 달리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이 ㉠에 들어갈 수 없다. ③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은 시민 단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에 들어갈 수 없다. ④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는 A는 정당이다. 그러나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을 담당한다.
- A는 위헌 법률 심판, B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① 헌법 소원 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헌법 재판소 재판관 9명 중 4명이 합헌 결정을 내리면 6년 전의 합헌 결정은 유지된다. ② 벌금은 재산형이다. ③ ㉢은 산모의 자기 결정권, ㉣은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한다. ④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후 청구한 B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⑤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① 공작물 소유자 책임,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 사용자 배상 책임 중 무과실 책임에 해당하는 것은 공작물 소유자 책임이고, 타인의 가해 행위에 대해 지는 책임은 사용자 배상 책임이다. 따라서 A는 사용자 배상 책임, B는 공작물 소유자 책임, C는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이다. ② 공작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이다. ③ 유치원생 아이의 장난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모가 배상하는 경우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해당한다. ④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 사용자 배상 책임 모두 과실 책임에 해당한다. ⑤ 사용자 배상 책임,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 공작물 소유자 책임 모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인정된다.
-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③ 의원 내각제의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분리·독립된 상태에서 밀접한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①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② 의원 내각제에서 국가 원수는 명목상의 존재일 뿐, 실질적인 통치권이 없다. ④, 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국회의원의 국무 위원 겸직 허용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이다.
- ㄱ. 미성년자도 용돈처럼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갑과 을의 게임기 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고, 갑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ㄴ. 갑과 을 간의 게임기 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을은 갑의 부모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의 여부를 촉구할 필요가 없다. ㄷ.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인지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ㄹ.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므로 갑의 부모도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④ ㉠은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고, ㉡는 행위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①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②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로 C에 해당한다. ③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B에 해당한다. ⑤ 고의로 한 행위라도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친 후, 책임에 대한 판단을 한다.
- ⑤ 밀줄 친 '이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계약 자유의 원칙은 개인은 자기 의사에 따라 상대방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계약과 같은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원리이다.

①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② 계약 공정의 원칙, ③ 과실 책임의 원칙, ④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15.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 ㉡은 표와 같다.

정당	지역구 의석(석)		비례 대표 의석(석)		총 의석(석)	
	㉠	㉡	㉠	㉡	㉠	㉡
A	55	55	45	35	100	90
B	40	40	35	30	75	70
C	5	5	15	25	20	30
D	0	0	5	10	5	10
계	100	100	100	100	200	200

ㄴ. D당의 총 의석수는 ㉠을 따를 때 5석, ㉡을 따를 때 10석이다. ㄷ. B당과 C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 차이는 ㉠을 따를 때 20석, ㉡을 따를 때 5석이다. ㄹ. ㉠을 따를 때(총 의석률-정당 득표율)는 A당이 5%p, B당이 2.5%p, C당이 -5%p, D당이 -2.5%p이다.

ㄱ. ㉠, ㉡을 따를 때 모두 비례 대표 의석수는 A당이 가장 많다.

16. ② 갑이 수행인 신분을 경험하였고, 현재 가석방 상태라는 내용을 통해 갑에 대한 재판에서 자유형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① 피의자 신분인 갑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주체는 법원이다.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 신분에서도 보장된다. ④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 단계에서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이 집행 중인 자에 대해 남은 형기 동안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임시 석방하는 형사 제도이다.

17. ㄷ. 소비자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ㄹ. 소비자는 자신이 구입 또는 이용하려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ㄱ. 소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갖지만, 자료에서 부각된 내용으로는 볼 수 없다. ㄴ. 소비자는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함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지킬 권리를 갖지만, 자료에서 부각된 내용으로는 볼 수 없다.

18. A는 국제 관습법, B는 조약, C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④ 조약은 국가 간에 체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체결되기도 한다.

①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한다. ②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③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⑤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될 수 있다.

19. ㄴ.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은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ㄷ. 을이 병을 해고한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이면서 동시에 부당 해고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병 본인 이외에 노동조합도 노동 위원회에 병의 해고와 관련하여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ㄱ.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모두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ㄷ. 해고 처분과 관련한 행정 소송은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다.

20. A는 국가, B는 국제 연합이다. ㄱ.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국민을 바탕으로 주권을 갖는 독립적 행위 주체이다. ㄷ. 국제 연합의 총회에서는 표결 시 1국 1표 원칙이 적용된다.

ㄴ. 국제 사법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 모두가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관할권을 승인하고 있거나 합의하여 제소할 때에만 재판을 할 수 있다. ㄹ. ㉠은 자유주의이다. 힘의 균형을 강조하는 관점은 현실주의이다.